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00
----------	-----

제출연월일 : 2008. 2. 15.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중복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제3조).

나. 대전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보호구역 외곽경계 등을 정함(안 제26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문화재청장과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7. 12. 21. ~ 2008. 1. 9. / 접수 의견 없음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재(이하 “시지정문화재”라 한다),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이하 “문화재자료”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
2. 시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대전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이하 “시문화재”라 한다)의 중요한 수리 또는 복구의 명령
5. 시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시외반출 허가
6. 시문화재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7. 시문화재의 매입
8. 시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
9. 그 밖에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 제27조 및 제30조제4항중 “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시지정문화재의 지정)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그 무형문화재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중 “영 제10조제1항”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0조제2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인·허가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유산에 대하여는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00미터까지로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 2. 시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지정문화재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4호”를 “법 제34조·제75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법 제41조”를 “법 제46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시지정문화재”라 함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삭제>

현행	개정안
<p>3. 기념물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p> <p>가. 사자·고분·패총·성지·연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p> <p>나.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p> <p>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p> <p>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민족의 기본적인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p> <p>②이 조례에서 “문화재자료”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장이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③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p> <p>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시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이하 “시문화재”라 한다)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p> <p>제4조(설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lt;삭제&gt;</p> <p>제4조(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재(이하 “시 지정문화재”라 한다),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이하 “문화재자료”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li> <li>2. 시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li> </ol>

현행	개정안
<p>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p> <p>1. 시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p> <p>2. 시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p> <p>3.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p> <p>4. 시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p>	<p>3. <u>대전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u></p> <p>4. <u>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이하 “시문화재”라 한다)의 중요한 수리 또는 복구의 명령</u></p> <p>5. <u>시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시외 반출 허가</u></p> <p>6. <u>시문화재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u></p> <p>7. <u>시문화재의 매입</u></p> <p>8. <u>시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u></p> <p>9. <u>그 밖에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u></p> <p><u>&lt;삭제&gt;</u></p>



현행	개정안
<p>5. <u>시지정문화재의 시외반출 허가</u></p> <p>6. <u>시문화재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거·이전등의 명령</u></p> <p>7. <u>시문화재의 매입</u></p> <p>8. <u>시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p> <p>9. <u>기타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제7조(위원장 등) ①<u>위원장은 행정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14조(수당과 여비) <u>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15조(시지정문화재의 지정) ①<u>시지정문화재는 시장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u></p>	<p>제7조(위원장 등) ①<u>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당과 여비) <u>대전광역시</u>----- ----- ----- ----- ----- -----</p> <p>제15조(시지정문화재의 지정) ①<u>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u></p>

현행	개정안
<p>②시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 지정한다.</p> <p>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p> <p>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보유자외에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그 무형문화재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를 인정하여야 한다.</p>
<p>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lt;삭제&gt;</p> <p>②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4조의3(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1. ~ 2. (생략)</p> <p>② ~ ⑦ (생략)</p>	<p>제24조의3(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26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p> <p>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p> <p>②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제26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p> <p>①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0조제2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인·허가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유산에 대하여는 문화재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00미터까지로 한다.</p> <p>1. 국가지정문화재</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p>

현행	개정안
<p>③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 지점에서 200m 이내의 지역</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 지점에서 500m 이내의 지역</p> <p>④제3항의 규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당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p>	<p>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p> <p>2. 시지정문화재</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지정문화재는</p>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검토 및 조치사항)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반출금지) 시지정문화재와 가 지정문화재는 <u>시의</u>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문화재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고 그 반출한 날부터 1년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검토 및 조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27조(반출금지)----- ----- <u>대전광역시</u> ----- ----- ----- ----- ----- ----- ----- -----

현행	개정안
제30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 ③ (생략)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시가</u> 부담할 수 있다.	제30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대전광역시</u> -----
제39조(조사요청) ① (생략) ②제1항의 조사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문화재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u>법 제41조</u>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조사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법 제46조</u> -----

## 관 계 법 령

### □ 문화재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 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문화재위원회 설치) 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 반출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문화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수리기술자자격증 등) ①문화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이하 "수리기술자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허가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6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72조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시·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5조 (준용규정) ①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4항 및 제35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②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9조,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90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①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①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현저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용역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 소속하에 각각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발주청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5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①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그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가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가 보유하여야 할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수는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수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보유현황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 공사업의 등록증 사본(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한다)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실측·설계업에 한한다)
4.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박제업등록증 사본(박제 및 표본제작업에 한한다)
5. 소속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수리업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상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수리업자 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수리업자 등록수첩(전자문서로 된 등록수첩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수리업자 등록증(등록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법 제27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수리업자의 상호
2. 수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보유현황

⑥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보수단청업 또는 조경업에 한한다)
2.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실측·설계업에 한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⑦제5항제4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2. 해당 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시·도지사는 수리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되면 그의 수리업자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⑨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수리업자 등록현황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수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3. 제8항에 따라 수리업자 등록대장을 이송 받은 경우

제30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 ②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등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등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③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시지정문화재”라 함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중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문화재보호법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5호>
  - 가. 사지·고분·패총·성지·연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나.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 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5호>

②이 조례에서 “문화재자료”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장이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5호>

③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시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이하 “시문화재”라 한다)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 제 2 장 문 화 재 위 원 회

**제4조(설치)**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1. 시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2. 시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3.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4. 시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5. 시지정문화재의 시외반출 허가
6. 시문화재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등의 명령<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7. 시문화재의 매입<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8. 시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9. 기타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5호>

**제9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4개 유형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단서삭제 2002. 10. 04 조례 제 3125호>

③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 06. 15 조례 제3503호>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15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5호>

**제12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관광문화재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7. 05. 11 조례 제3486호>

**제14조(수당과 여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장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 제 1 절 지 정

**제15조(시지정문화재의 지정)** ①시지정문화재는 시장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시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 지정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보유자외에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삭제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②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02. 10. 04 조례 제3125호><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 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2. 10. 04 조례 제3125호>

**제17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 ①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시지정문화재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5호>

②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할 때에는 그 보유자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시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은 제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9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①시장은 시지정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무형문화재의 경우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원이 사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시장은 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정문화재가 해제된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시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2002. 10. 04 조례 제3125호>

제20조<삭제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제21조(문화재 자료의 지정) ①문화재자료는 제2조의 문화재중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에서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것을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시장은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건조물과 오래되지 아니한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확대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재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제22조(준용)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문화재자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 제 2 절 관 리 및 보 호

제23조<삭제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제24조(수리 등)시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5호>  
<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제24조의2(문화재수리용역 시공의 평가 등)**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를 발주한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당해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 06. 15 조례 제 3503호>

1. 문화재수리용역사업 : 사업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문화재수리공사 :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사적·학술적·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자 또는 수리공사업자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하고 우대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는 4인
2.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인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의 선정 및 평가<개정 2007. 06. 15 조례 제3503호>

2.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의 지정

⑤시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기술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촉위원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기록의 작성보존)**①시장은 시문화재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②시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삭제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제26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 지점에서 200m 이내의 지역<개정 2007. 06. 15 조례 제3503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문화재의 외곽경계) 지점에서 500m 이내의 지역 [본조신설 2002. 10. 04 조례 제3125호]<개정 2007. 06. 15 조례 제3503호>

④제3항의 규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당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행한다.<신설 2007. 06. 15 조례 제3503호>

**제26조의3(검토 및 조치사항)** ①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제26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문화재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2.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일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제27조(반출금지)**시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는 시의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문화재의 전시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고 그 반출한 날부터 1년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삭제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제29조(문화재의 매입)**시장은 시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유자가 매도하는 문화재를 매입할 수 있다.<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제30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①시장은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유자후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당해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유자 및 보유자후보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가 부담할 수 있다.

**제31조(전수장학생)**①시장은 시지정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자 중에서 분야별 종목에서 해당하는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06. 15 조례 제3503호>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시지정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③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7. 06. 15 조례 제3503호>④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전수교육기간, 추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전수장학생을 선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전수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삭제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제33조(보조금)** ①시장은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장이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자치구청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 사용하도록 한다.<개정 2007. 06. 15 조례 제3503호>

**제34조(손실의 보상)**시장은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제35조(준용)제24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시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 제 3 절 공 개

제36조<삭제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제37조<삭제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 제 4 절 조 사

제38조<삭제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제39조(조사요청)①시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②제1항의 조사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문화재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제40조(준용)제39조의 규정은 시문화재의 지정 또는 가지정을 위하여 행하는 조사 등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 제 4 장 보 칙

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①시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그 새 소유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행한 명령, 지시, 기타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②제1항의 규정은 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이의신청)**①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치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7. 06. 15 조례 제3503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기타의 자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5호>

**제43조(표창)**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7. 06. 15 조례 제3503호>

1. 시문화재로 지정한 매장문화재를 발견 신고한 자.<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2. 관리, 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시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3.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이외의 자로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4. 시문화재를 관리·보호·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육성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개정 2003. 10. 31 조례 제3197호>

**제44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